

I. APEC과 주요 환경논의 : 조기개방과 Ecotech

- APEC의 여러 가지 활동 중 환경 부문의 국제적·국내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조치 및 기구들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 금년 6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APEC 회의 이후 부문별 조기 자유화(Liberalization)의 대상 항목으로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이 실질적으로 결정됨
- 이에 따라 9월중 말레이시아 쿠안탄에서 열릴 조기자유화 분야별 회의 및 고위관리 회의 이후 1999년부터 조기 자유화가 실시될 예정으로 되어있음
- 또한 APEC의 경제-기술협력 프로그램(Ecotech)에서 환경 기술 및 정보에 대한 협조 조치가 점점 더 가시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1. 들어가는 말

금년 6월 22~23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는 WTO에 대한 APEC의 기여라는 대전제 하에서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조기 자유화(Early Liber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여기에서 제 1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방의 문제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 등의 소위 환경선진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방 노선을 취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개방 반대 진영에서도 작년 캐나다의 토론토 회의에 비하여 후퇴한 입장을 취하여 개방의 대원칙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물론 실질적인 개방의 폭이나 개방의 정도,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로 미루어지기는 하였지만, APEC 내에서의 조기개방과 함께 WTO를 통한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거스르기 어려운 추세가 되었다.

현재의 일정 상으로는 1999년이 개방의 일자로 잡혀있으며, 현재 시점으로는 불과 6개월 남짓한 시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IMF 경제시대라는 총체적 위기를 맞은 한국의 여러 가지 형편상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APEC의 지금까지의 환경 논의 및 이러한 개방이 미

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무역 및 투자자유화 외의 APEC의 또 다른 주요 활동영역인 경제-기술 협력 프로그램인 Ecotech에서의 환경 논의,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APEC 연혁 및 조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역내 주요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역내 최초의 정부간 협의체로 89년 호주 캔버라에서 발족하였다. APEC은 EU나 NAFTA 등과 함께 세계 경제시스템 내에서 주요 지역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APEC의 결정은 EU와 같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가들 사이의 상호 신뢰하에 나름대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회원국 사이의 구속력 있는 협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국제기구라기 보다는 대화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 협의체의 성격이라는 출발 당시의 취지에 비하여 APEC의 위상이 여러모로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과 함께 지역블록화라는, 소위 세계적이며 지역적인 경제시스템의 형성이라는 “glocalization(globalization + localization)”의 추세를 그 주된 이유로 거론할 수 있다. 실제로 APEC(캐나다 포함)은 1996년 미국에 총 1,900억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에 최대의 투자자였으며, 또한 미국의 투자가들도 APEC 국가에 2,225억달러를 투자하였다. APEC의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이 62% 차지하고 있으며, EU는 21%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의 APEC 국가에 대한 투자가 70%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69% 증가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APEC 회원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을 제공하며, 이들 국가의 수출의 20% 정도를 미국이 수입하고 있다.

APEC에는 현재 1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 PECC), ASEAN 사무국, 남태평양 도서국 연합체(South Pacific Forum : SPF) 등의 3개 단체가 observer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97년 밴쿠버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베트남, 페루, 러시아가 '98년 제 6차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부터 회원으로 신규가입할 것이다.

<표 1> APEC 회원국

구분	국가
ASEAN(6개국)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부르나이
미주(4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오세아니아(3개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중화(3개국)	중국, 대만, 홍콩
기타	일본, 한국
가입예정	베트남, 페루, 러시아

APEC의 정식조직으로는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고위실무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 10개의 분야별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 WG), 3개의 위원회(Committee) 그리고 APEC 사무국 등이 있으며, 이 조직들은 각자의 임무를 할당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각료회의는 공식적인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외무-통상장관으로 구성되며 연 1회 개최되어 APEC 전반의 운영방향 및 입장을 정립한다 (89-호주, 90-싱가폴, 91-한국, 92-태국, 93-미국, 94-인도네시아, 95-일본, 96-필리핀, 97-캐나다, 98-말레이시아). 고위실무회의는 각료회의 준비를 위하여 각료회의 개최 의장국에서 연간 4~5회 정도 개최하는 실질적 운영기관이며, 국장급이 대표로 참석한다. 실무그룹회의는 회원국 과장급을 대표로 하여 분야별 협력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며, 무역 및 투자데이터, 무역진흥, 산업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에너지 협력, 해양자원보존, 통신, 수산, 교통, 관광의 10개 그룹이 현재 활동 중이다. 이외의 공식조직으로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CTI)는 역내 투자 자유화 및 무역 개방, 그리고 WTO와의 연계 관계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PEC의 비공식조직으로는 APEC정상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 분야별 각료회의, 경제자문회의(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BAC) 등이 있으며, 이 중 분야별 각료회의는 과학기술, 무역, 환경, 통신, 교통,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활동 중이다.

이렇게 공식·비공식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APEC의 실질적인 양대 주제로 1) 무역자유화 및 투자원활화(Trade Liberalization and Investment

Facilitation : L&F)와, 2)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Ecotech)이라는 두 축이 형성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는 주된 활동이 무역자유화 및 투자원활화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97년 오사카 정상회의 및 '97 밴쿠버 정상회의 등에서 산업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3. 환경상품 및 서비스 조기 자유화 논의

'조기 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는 '97년 밴쿠버 각료 회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주제로, WTO 및 OECD의 세계화 논의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항이다. 몬트리올 무역각료회의에서 세계적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서 APEC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밴쿠버 각료회담에서는 APEC의 leadership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기 자유화라는 주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APEC이 WTO나 EU 논의 자체를 주도해나가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함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APEC 내의 회원국들이 동일한 기술 및 경제적 개방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형적인 다자간협상(multilateral agreements)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쌍무협정과 다자간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쌍무협상은 특정 국가의 특수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 양보 혹은 유예 조항을 가질 수 있는, 즉 유연한(flexible) 협상이 가능하지만, 다자간 협상은 여러 국가들 특히 회원국이나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협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달리하는 블록 사이의 게임과 같은 양상이 벌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환경 부문에서의 지구적 규모의 협상은 대개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MEA)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저개발 국가로 다른 입장의 국가들이 서로 블록을 형성하며 지리한 협상을 끌어내는 기후변화협약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APEC이 기본적으로 다자간협상의 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무역자유화는 비단 역내 문제 뿐아니라, WTO 등의 국제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APEC의 합의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 2000년 이후로 개방 일정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기자유화를 실시에 대해서 회의에 상정된 APEC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환경제품 및 서비스
- 에너지 부문
- 어류 및 어류가공품
- 식품 부문
- 완구류
- 자연 및 합성고무
- 삼림가공품
- 경운기
- 보석류
- 자동차(automotive)
- 유과 및 유과가공품
- 의료 장비 및 기구
- 화학제품
- 민간항공기
- 쌍방인식 텔레코뮤니케이션(MRA)

위의 항목에 대하여 자유화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밴쿠버 각료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조치의 동의 과정 및 개별적 사정에 대한 협의는 상당한 논란거리로 남는다. 무엇보다도 APEC의 결정이 WTO의 경우와 같이 불성실한 이행시 법률적·경제적 규제를 가질 수 있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발적(voluntarism)’에 관한 사항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개별적 국가의 차이에 대한 조화 등의 문제가 강조되었다. 자발주의라는 틀 하에서 각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종의 팩키지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9가지 항목이 우선적인 조기 자유화의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 환경제품 및 서비스
- 에너지 부문
- 어류 및 어류가공품
- 완구류
- 삼림가공품
- 보석류
- 의료 장비 및 기구

- 화학제품
- 민간항공기
- 통신상호인증협정(MRA)

당초 한국측은 이 과정에서 환경제품 및 서비스 부문을 제외시키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보다 나은 환경제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부문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과 한국의 반대진영측이 붕괴된 것은 완구류에 대한 개방에 의하여 중국측 입장이 급선회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다자간협상의 전형적인 거래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다자간협상은 2개 혹은 3개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블록 사이의 대립을 가지게 되는데 - 그렇지 않은 협상은 대개 만장일치로 쉽게 타결을 보게 된다 - 이러한 블록의 특정 국가의 (반대진영이든, 찬성진영이든) 결정적인 양보를 얻어내게 된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고립되어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쌍무협상에서는 이러한 고립은 종종 회담결렬로 이어지지만 다자간협상에서는 특정 국가가 회담결렬의 부담을 혼자 지기 어렵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인을 할 수밖에 없다. 완구류 개방에 따른 중국측의 입장 선회와 다른 국가들의 동의 과정은 전형적인 다자간협상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자유화 대상으로 포함된 환경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논의는 금년 6월 22-23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 APEC 회의에서도 계속하여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밴쿠버에서 결정된 조기자유화에 대한 원칙 등이 재확인되었지만, 국가별·항목별 신축성에 관한 부분에서 이견이 드러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환경 부문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어떻게 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국가별 발전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정책의 국가별 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등이다. 또한 자유화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벽한 철폐인가, 혹은 관세율 통일이 자유화의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환경설비에 대해서 일반기계류와 동일한 관세율을 부가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 (국내생산이 불가능하며 환경기여도가 높은 설비 등)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관세장벽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자유화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환경 엔지니어링

이나 환경시공 혹은 환경계측 등의 환경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비관세 장벽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 각종 관급 공사나 수주 등에 외국 엔지니어링 회사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환경 상품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환경설비 등 환경질 향상 및 오염물질 배출 저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설비를 의미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광의의 환경상품은 환경 및 에너지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품, 즉 기존제품에 비하여 환경친화성이 높아진 제품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기존의 상품 분류가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하여, 환경상품이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애매성을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타자기라도 제품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덜 발생시키거나 혹은 재사용·재순환이 용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환경상품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애매성은 곧 제한되어 있고 잘 정의된 부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서 환경 상품 및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즉 환경상품에 대한 자유화가 모든 일반 상품에 대한 포괄적 자유화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의의 문제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기 개방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국가별 발전 단계의 상이성을 어떻게 해소하여 형평적인 개방정책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APEC이 제안한 해결방식은 경제 및 기술협력프로그램인 Ecotech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부분의 기술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은 APEC이 무역 및 투자자유화라는 협상 목표 외에 역내 기술수준 향상이라는 최근에 강조된 또 다른 목적과 연계되어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문이다.

4.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조기 자유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

관세자유화를 포함한 일련의 자유화 일정은 1999년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환경산업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집계된 바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환경통계 중 주요 부문이 지출통계(statistics on environmental expenditure)에 의하여 집계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산업 통계는 체계적으로 집

계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화가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밖에 추계할 수가 없다.

현재 한국의 환경산업 및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의 시도에 비해서 정교한 분석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체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밖에는 논하기가 어렵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일부 업체에서는 자체 연구소를 설치하여 소각시설, 오·폐수 고도처리기술 등 첨단환경기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환경산업체는 자본이 영세하여 자체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환경백서, '97, 273p)

어쨌든 현재 우리 나라의 환경산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17여종에 10,000여개가 있으며, 연간 총 매출규모는 1995년 기준으로 약 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99년부터 환경상품이 조기개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환경산업 및 환경서비스 부문이 위협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의 환경산업은 IMF로 인하여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으나, 어쨌든 환란 이전까지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방지시설업체의 기술력도 문체가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사업 규모의 영세성도 지적될 수 있다. '96년 현재 총 769개의 업체 중에서 자본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268개로 전체의 35%를 차지하지만, 2~5억원 사이의 업체는 436개에 달하고, 자본금 10억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환경산업계가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 내부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한국 협상 전략의 주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적으로 현재의 환경관련 수입액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기자재의 관세감면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표2> 환경오염방지 기자재의 관세감면 추진현황('96)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소음·진동)
추천금액	230,369	7,458	133,171	83,458	6,282
추천건수	137	25	72	34	6

위의 표에 의하면 '96년 환경관련으로 수입된 기자재 중 관세감면의 대상으로 추천받은 액수는 2,300억원에 달한다 (수입환경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현실적인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함께 환경관련 기자재의 수입은 더욱 더 급증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민 환경의식의 고취 및 환경관련 인허가의 문제 등 환경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외국업체의 활동영역이 더욱 늘어나고 양적으로도 수입액수가 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유화가 이제 갖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총 4조에 달하는 현재의 환경시장이 연평균 10%씩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내 10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수 시장에서의 무역역조 심화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극단적으로 이러한 개방화를 통하여 환경업체의 근간(fundamental)이 붕괴된다면, OECD가 2000년 기준으로 3,000억 달러로 추산하는 국제 환경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참고로 1994년 미국은 중요 기술관련 산업으로 환경산업을 제 1위로 선정, 전략산업으로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환경백서 참조).

이러한 점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면 APEC의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조기 자유화 논의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들의 개방화 노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후발 국가들 사이의 힘겨루기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개방이 결정된 것은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환경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적을 한다면,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계측업의 낙후성이다. 최근 수년간 다이옥신과 VOCs 등 주요 정책적 관리대상인 물질의 범위는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형편인데, 기존의 측정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효과적인 기술적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국내 측정업계에 대한 시민들의 누적된 불신감까지 고려한다면, 환경서비스 분야는 외국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종속 단계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5. APEC 환경장관회의와 Ecotech 프로그램

APEC은 시장 조기 개방 외에도 환경각료회의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 부문에 개입하고 있다. '97년 6월 토론토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장관회의”에서 환경과 관련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공동 선언문도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ies)
- 해양환경의 지속성
-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이행

이러한 APEC 논의의 특이점은 도시 환경의 지속성에 대한 강조가 개도국이 많은 아시아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경제적 개발과 환경을 양립시킬 수 있는 청정생산에 대한 강조 등이다. 토론토에서 각국의 환경부 장관들은 청정생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 청정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의 개발 및 사용
- 과학, 기술 그리고 연구 네트워크의 참가 및 개선
- ISO 14000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경영시스템의 적용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 및 정책 정보의 공유 능력 및 메카니즘 개발
- APEC 환경기술교환을 위한 가상 센터, APEC 기술교환센터, 중소기업훈련프로그램 등의 전자정보체계의 확대
- APEC 역내의 기술전파 진작
- 특정 부문에서의 시범 프로젝트 촉진

이러한 환경장관들의 합의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APEC의 경제-기술협력 프로그램인 Ecotech(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와 함께 결합되며 보다 구체성을 띠게 된다. 출범 당시 경제기술협력 보다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 쪽에 보다 많은 강조를 하였던 APEC이 점점 더 Ecotech에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역내 협력을 통한 실질적 이득 발생을 통하여 회원국 사이의 협조 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APEC 자체를 공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95년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EPG)의 3차 보고서는 역내기술 협력의 증진을 위한 4대 실행계획(Four-point Action Plan)을 제안하였으며, ‘97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3차 APEC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고위실무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을 구분하여 정규 SOM에서 Ecotech를 그리고 비정규 SOM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논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제 2차 APEC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강택민 주석의 제안에 의하여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논의가 각료급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며, ‘96 서울각료회의 등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어져 나간다. 역내 협력의 가시화라는 명분 아래 지속적으로 공식화되고 정례화된 Ecotech은 이제 APEC의 사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오사카에서 규정된 Ecotech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있는 발전의 달성
2. APEC 역내 경제 사이의 불균형 감소
3. 대중의 경제적·사회적 후생 증가
4. 개방의 정신하에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

이러한 목적 의식하에서 각 실무그룹이 주도하는 합동활동(Joint activities)이 APEC 사무국의 공식적인 승인하에 수행되고 있는데, 각 부문별로 이러한 합동활동은 다음과 같다 :

<표3> Ecotech의 Joint-activities (1996년)

인력개발	86	무역 및 투자	5
산업 과학 및 기술	41	무역 진흥	13
중소기업	20	해양 자원 보존	7
에너지	43	어업	12
수송	13	농업 기술협력	35
정보통신	26	경제 인프라	9
관광	10	계	320

위의 13개 Ecotech 항목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은 결합주제(over-arching theme)의 위상으로 설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한 도시, 해양환경의 지속성, 청정생산,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APEC의 4가지 환경관련 주제를 별도의 실무작업반에 의해서 운영하기 보다

는 관련된 실무작업반과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을 APEC은 채택한 것이다. 위의 산업 과학 및 기술 실무작업반은 청정생산에 관한 부분을, 해양자원보존 실무작업반은 해양환경의 보전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 이러한 결합연구 방식에 의하여 현재 APEC에서 환경관련 결합활동으로 진행하는 연구는 <표4>와 같다.

APEC의 환경관련 이슈는 95~96년도 회의에서 상당한 합의를 보았으며, 이제 Ecotech를 통하여 막 자리잡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 부문의 Ecotech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APEC 자체가 EU와 같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아니며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역내의 균등한 발전에 보다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기구라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ASEAN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ARF(Asean Regional Forum)와 같이 정보 및 기술 공유의 네트워크로서의 APEC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금까지의 WTO와 연계하여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맞추어져 있던 무게 중심이 경제 및 기술 협력 프로그램인 Ecotech 쪽으로 이전하여 나가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일부 시장의 조기 개방(early liberalization)과 관련하여 보다 불평등한 경제적·기술적 관계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국가들에게 APEC이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프로그램이 Ecotech라는 점이다. 금년 6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된 APEC 제2차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 CTI)에서는 분야별 조기개방과 관련하여 의장보고서의 Ecotech 관련 사항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 중국에 의해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지적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이 공동활동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 교류에 대한 가상 센타 설립을 보다 범위를 넓혀 특히 환경기술에 대한 역내 교류의 기구로 발달시켜야 한다는 점 등이 주장되었다. 결국 조기개방과 Ecotech가 균형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개방을 통한 역내 경제의 불균등성 심화를 경제 및 기술 협력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합활동 (1998)

국가	프로젝트	비고
미국	신기술 평가 기법에 대한 워크샵	신규
미국, 한국, 싱가포르, 중국	전자 및 컴퓨터 부문의 청정생산 실현	신규
미국, 캐나다,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환경개선 및 진척을 위한 APEC 경제의 산업환경성과지수의 사용	신규
캐나다,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청정생산기술 : 오염방지를 위한 혁신 및 학습에 대한 제안	신규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APEC 경제의 섬유염색 및 가공산업에 대한 훈련 과정	신규
일본	산성비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한국	종다양성 및 종변화에 대한 APEC 조인트 연구	진행
일본	환경기술 교환을 위한 APEC 가상 센터	진행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APEC 역내를 위한 분자생물학 네트워크(IMBN)	신규
일본, 미국	환경 주제에 대한 연구 협력 i) 지구 관찰 정보 네트워크(Earth Observation Information Network : EOIN) ii) 우주 관찰데이터를 사용한 지구현상 이해 연구 iii) 지구 내부 동학	진행
한국	해양 환경에 대한 APEC 조인트 연구	진행
캐나다, 미국	APEC의 신규 전염병	진행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단기 기후예측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용	신규

6. 결론

97년 후반부터 아시아 경제는 일종의 외환 도미노 현상과 같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지켜내는 어려움 싸움에 들어갔으며, 이 속에서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위안화의 절하 위협 속에서 자신의 화폐 가치 결정에 대한 힘든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93~94년, 유럽 통합과 관련하여 프랑화-파운드화-마르크화 사이에 벌어졌던 일련의 유럽 외환위기와 일정한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IMF의 아시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Fund에 대한 제안이 APEC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APEC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어쨌든 APEC과 EU의 가장 큰 차이점은 EU가 governing 기구라고 한다면 APEC은 cooperation 기구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APEC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축소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편향이 있

다. 그러나 1996년 미국 수출이 유럽 시장에서 21%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APEC 국가에서 62%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APEC이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기능, 1992년에서 1996년 사이 미국의 APEC 투자가 50% 증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APEC 국가들이 실현한 해외직접투자 등을 고려하면 APEC의 영향은 사실 EU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우리는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기자유화 일정 (1999년 시행 예정) 및 Ecotech를 통한 환경기술 협조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자유화가 WTO에 대한 APEC의 기여라는 명분 하에 “세계화(globalization)”의 한 경향을 보여준다면, Ecotech는 역내 협력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라는 “지역화(localization)”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축들이 모두 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의 한 일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다국적기업의 통합화 전략의 요소들을 이러한 기구들이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 개방 + 기술 협력”이라는 통합 외교전략은 이제는 시장의 효율과 국가간 형평성을 조율시키는 방식으로 비단 APEC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협상 그리고 특히 MEA를 비롯한 각종 환경협약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게 될 전략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적 협상을 통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는 이미 유형·무형의 특수 자산 (기술, 네트워크, 부품 공급자 및 고객과의 특수한 관계, 인적자산 등)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산을 확보할 장치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 개방과 함께 벌어질 국제적 기술독점에 대해서 APEC 등의 국제기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외부성” 및 “공공성”을 근거로 하여 각종 기술 협력 및 정보 교류 프로그램 혹은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도의 일이다. 물론 ADB나 IBRD 등의 국제은행을 통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일도 패키지로 설정될 수 있다.

APEC의 환경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러한 통합화 전략을 우리 나라가 내재화시켜 필요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점으로 귀결되게 된다. 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 있어서 조기 시장개방은 새로운 國富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국가에게 있어서는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등 각종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기 개방 등의 조치는 APEC 내에서 Ecotech라는 또 다른 협력방안과 쌍으로 움직인다. 현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조기 개방에 대한 반대보다는 Ecotech에서 보다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후된 국내 환경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평가 및 장기 비전과 함께 국제 협력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공 프로그램은 생산주체이며 기술개발의 주체인 기업의 이해와의 합일없이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97년 이후 APEC의 환경부문에서 민간 자본 및 민간 파트너십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APEC 환경프로그램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자본 유치와 관련하여 보다 관점을 전환시켜 본다면, 어쩌면 조기 자유화를 통하여 외국계 환경 엔지니어링 회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환란 이후 평가절하된 한국 엔지니어링의 노동력과 외국 자본 및 기술력을 결합시키는, 즉 새로운 환경 엔지니어링 국제 기지로서 한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방안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basic engineering 부분에서 기초 설계 및 감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외국에 기술종속되어 라이선스나 기술협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개방의 방안 등도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바이다.

우 석 훈 (환경경영기획팀 수석연구원)